

시론



진호림

(주)리얼프로텍 대표이사

유튜브, 보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유튜브에 도전해 볼 것인가? 현대인에게 유튜브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언제부터 우리는 유튜브로 뉴스를 보고, 영화나 드라마도 유튜브에서 본다. 글을 읽는 것보다 영상을 보는 것이 직관적이고, 영화나 드라마도 해설을 곁들인 짧은 리뷰 영상을 몰아 보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단순히 영상을 보는 플랫폼을 넘어 다양한 경제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유튜브 월간 이용자 수는 4천624만 명에 이른다. 1인당 평균 이용 시간은 43시간으로, 매일 1시간 반 이상 유튜브를 이용한다. 유튜브는 이러한 이용자를 기반으로 광고와 디지털 음원 등 여러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유튜브는 최근 '쇼핑 전용 스토어'를 개설하며 쇼핑 분야에서도 독점력을 확대하고 있다. 유튜브 쇼핑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사고 싶은 상품이 보이면, 바로 쇼핑이 트로 이동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서비스다. 판매자는 구글 계정을 통해 간단히 스토어를 개설할 수 있고, 소비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쇼핑을 할 수 있다.

유튜브는 힘이 세다. '쇼핑' 해 볼까?

유튜브 쇼핑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한 판매와 구매 환경이다. 이는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도 친숙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젊은 세대들이 동영상 플랫폼을 단순히 재미가 아닌 쇼핑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이커머스 시장의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한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한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 업체가 공격적인 확장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패션기업 쉬인과 틱톡샵도 상륙을 앞두고 있다. 이들 업체에 대한 대응도 버거운 상황에서 더 강력한 경쟁자를 맞닥뜨린 '토종' 플랫폼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급성장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 플랫폼이다. 지난해 3조 원이던 시장 규모는 2023년 1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네이버가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카카오의 그림과 쿠팡, 그리고 홈쇼핑 업계도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은 유튜브의 라이브커머스 시장진출에 맞서 판매자 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다. 라이브 방송 권한을 완화하고 상품에 적합한 쇼호스트를 지원하는가 하면, 수수료를 인하, 메인 화면 노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판매자의 이탈을 막고, 새로운 판매자를 모으려는 조치다.

라이브커머스의 수수료를 인하는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큰 관심사다. 라이브커머스는 TV홈쇼핑보다 판매수수료가 낮

아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들이 주로 이용해왔다. 유튜브는 이미 '수수료제로' 정책을 선언한 상태다. 낮은 수수료율은 판매자의 플랫폼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물건값을 낮출 수 있어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업계에서는 유튜브 쇼핑의 등장이 '채널 다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전 세계 유튜브 월간 이용자는 2억 명이 넘고, 80개의 언어로 서비스되는 콘텐츠는 경계 없이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다. 상품만 좋다면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광고도 판매도 가능하다.

유튜브 쇼핑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판매자나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다. 개인 유튜브 등 매자는 수의 창출의 수단이 늘어나서 좋다. 소비자도 다양한 상품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니 긍정적이다.

'쇼핑'이라는 말이 있다. 유튜브의 '쇼츠'와 '쇼핑'을 합친 말이다. 쇼츠는 60초 이내의 짧은 동영상이다. 이 영상 하단의 '제품보기'를 누르면 스토어로 연결된다. 쇼츠를 이용해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쇼츠를 보면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도 있다. 유튜브는 쇼츠를 쇼핑의 성공 열쇠로 보고 있다.

유튜버를 희망하는 사람은 영상 제작이 가장 힘들다고 말한다. 긴 영상이라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쇼츠는 짧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편집은 갤러리 앱이나 유튜브가 제공하는 편집 도구를 사용하면 손쉽게 시작할 수 있다. "60초, 그대 쇼츠 정도라면 부딪쳐볼 만하지 않은가?"

자치칼럼



임우진

민선 6기 광주 서구청장

주민자치는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 구현장"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단체자치에 치우친 우리 지방자치를 균형있는 자치로 발전시켜야 한다. 김대중정부는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명박정부는 주민자치회의 모델과 법적근거를 마련해 박근혜정부에서 시범 실시한 후, 문재인정부는 전국에 확대 실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 후 주민자치회 실종돼 보이지 않고 이에 관자행정시대로 되돌아간 분위기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고 핵심영역인 주민자치, 이명박·박근혜정부도 육성해 온 주민자치를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다루고 있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현 정부는 출범후 국정전반을 6대 목표, 120대 과제로 종합하면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분야를 통합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정리했다. 그중 지방자치 분야는 지방분권강화, 지방재정력강화, 지방인재육성,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소통협력강화의 4건으로 정리했다. 지방분권강화 과제안에 주민자치회 개선이란 항목에서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 및 지역연계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다양화,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주민의 자치역량 함양을 위한 의미있는 구체

현 정부의 주민자치 정책과 배경은?

적 정책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지방자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주민자치 정책을 검색해 보면, 윤석열정부 출범이후 주민자치 표준조례 개정과 주민자치회 개선 외에는 신규 주민자치 정책은 전무했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는 국정과제,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에서 분권강화, 재정력강화,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 핵심요소의 하나인 주민자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 육성, 주민의 자치역량 함양과 역량 강화 등은 정책적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일부 시도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등을 자체 과제로 들고 있는 곳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주민자치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주민자치박람회도 폐지했고, 주민자치 표준조례를 개정해 주민자치를 후퇴시키고 관련 예산과 인력지원도 축소했다고 사료된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현 정부는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은 중앙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일까? 주민자치에 대한 단단한 오해 또는 부정적 인식이 없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육성해 온 주민자치를 윤석열 정부는 왜 외면하고 억압하고 파괴하려고 하는가? 필자는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희천)'이라는 책을 접하고 이 책의 논리가 보수 정부의 지방자치, 주민자치 정책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와 확대과정, 공동체 마을만들기,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 활동 등 2000년대 이후 주민자치 육성 노력 모두를 좌파들의 세력확대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는

물론 교육공동체 활동,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경제공동체 활동과 자치경찰제까지도 상호 연계된 좌파생태계의 확대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들을 분석해 보면, 그들은 근본주의적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각에서 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 노력, 사회민주주의적 정책들을 모두 좌파적 정책이라고 비판 거부하면서 그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혼합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제3의 길, 복지국가 등이 모두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아니던가? 또한 주민자치가 좌파정책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면 주민자치가 활성화된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가? 어떤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객관적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맹목적 반대 폐지는 답이 아닌 것이다.

극단적인 이념대결, 냉전과 열전을 반복하다가 타협의 길로 들어서서 서로의 이념과 정책을 혼합 절충을 하면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지난 역사일진대, 아직도 양극단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크고 정책을 주도하게 된다면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개인, 집단의 이해보다는 국가와 지역의 장래를 위해 지혜를 모으려는 노력은 언제나 보게 될 것이다. 또한 보수의 우려를 씻어버리고 신뢰 속에 사회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도덕적 진보는 불가능한 일인가? 전국민이 내가 지지하는 이념, 정파, 지역보다는 진정으로 나라와 지역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절박함이 밀려오고 있다.

독자투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들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실시, 19세 미만 청소년 1천35명을 포함한 2천925명(구속 70명 포함)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모두의 관심 중요

도박을 수행한 주체인 '도박 행위자'(1천12명)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고등학생이 7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생 228명, 대학생은 7명이다.

청소년 도박 유입의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올해 2월7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을 국민제감 약속5호로 지정하고,

온·오프라인상 사이버·형사가 협업해 체계적 단속을 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숙지했으면 한다.

(박혜원·함평경찰서 경무과)

社說

또 무산 광주자원회수시설 자치구 주도적 역할하라

200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추진된 광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공모가 또 소독없이 끝났다. 파격적 인센티브도 눈길을 끌면서 2차에서 후보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쏠렸으나 결국 물거품이 됐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사결과에 따라 평가절차 보류를 결정했고, 재공모를 의결했다. 필수시설임에도 주민 반발이 걸림돌이었다. 자치구가 후보지를 신청받고 의견 수렴에 나서 물꼬를 터야 한다. 더 뒷집지지 말아야 한다.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발생지 원칙에 따라 처리의 책무는 자치구에 있다.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의 사례도 유사하다. 강기정 시장과 5개 구청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주도 방식으로 변경에 합의한 것도 타당하다. 사실 1차 6곳에 이어 이번에도 7곳이 신청해 가능성을 키웠다. 이후 요건 미충족과 신청 철회 등으로 서구 매월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삼거리 등 3곳이 남았는데 해당 주민들은 삭발과 집

회 등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 바람과 달리 최종 무산된 이유가 이와 무관치 않다. 소각장 시설은 총사업비로 3천240억원이 투입된다. 폐기물시설축전법 상 공사비의 20%인 600억~800억원 정도의 문화·체육·여가 등 편익시설 설치와 주민 지원금을 비롯한 1천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도 별반 효과가 없었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에 반드시 필요하다. 한 마음으로 땀흘리고 나서야 한다.

다시 원점이다. 광주시와 자치구가 자원회수 시설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야 한다. 공동 회견을 통해서도 적정 후보지 1개소 이상 신청을 위해 공감대가 형성된 바, 앞으로 속도가 붙어야 할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공사 등에 수년이 걸린다. 2000년 준공해 시험 가동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촉박하다. 이대로면 지연 사태가 뻔하다. 3차 공모도 가시밭길이다. 더 행정력을 낭비하고 더 시간을 버리지 말라. 발등에 불이다. 광주시의 부담이 그만큼 더 해지고 있다.

민주성 위배 동구 주민배심원제 말 많고 탈 많을 것

전국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주민배심원은 선거 공약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의사결정기구로 대표성의 원칙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 실제로 참여 기회 보장 등 민주·공정성을 위해 성별·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임기는 구청장과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남구와 달리 동구를 포함해 서구, 북구는 1년 단위로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새로 뽑는다.

동구 주민배심원제의 필요성 논란이 불거졌다. 2차 선발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전화 면접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선착순 모집, 전문성 및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단체장의 공약 전체를 점검·평가받지 않고, 소위 '받고 싶은 것' 위주로 제한을 둔 사실이 알려져 뒷말을 낳는다. 동구는 가이드라인 격인 매니페스토본부의 권고안에 어긋남이 없으며, 공약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를 무자

위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설문조사에서 표본이 중요한 것처럼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즉각 개선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 배심원제를 형식적 역할로 운용해 비난을 사는 가운데, 동구의 사례도 그 중심에 서게 됐다. 구청장의 의중대로 원하는 결과를 내놓을 배심원이라면 오히려 나쁜 것이 아닌가. 입맛에 맞춰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셈이다. 구정에 대한 쓴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한낱 치적을 내세우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유권자인 주민들이 절대 용인할 리 없다. 나아가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훼손될 우려가 커진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책임 행정을 위한 장치다. 주민과의 약속, 공약을 점검하고 이행을 위한 배심원제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구성·운영돼야 한다. 광주 동구에서 무용론이 제기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아침물어는 詩

나중에

이향아

어머니는 늘 '나중에, 나중에'로 미루었다
먼 훗날 네가 크고 자-알 살게 되면
그 통에도 꼬박꼬박 날짜는 흘렸는데
옛날보다 나는 크고 자-알 살게 되었는가
나중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떠나시고
'나중에, 나중에'를 어디 가서 찾을까
나중은 깊은 절간 요사체에 붙잡혔나
나중이 오는 길은 문턱이 닳고 닳아
철통같은 공성 안에 보신하고 있는가

오늘은 길 미끄러워 되돌
아가 버렸는가
서늘 푸른 눈으로 말총
갓 둘러쓰고
어디에 비껴서서 나를
보고 있는가

(시집 '모감주나무 한 그루 서 있었네', 시와시학, 2024)

[시의 눈]

엄마와 손잡고 시장길 가던 아이가 멈춰 섰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쇼윈도에 매뚜기벌처럼 머물렀습니다. '엄마 저 인형...' 얼굴을 뻗히 쳐다봅니다. 한데, 그 눈을 곧 내려놓고 고쳐 말합니다. '음, 나중에 엄마의 얼굴에 낀 회색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후로 아이는 필요한 걸 말할 때 여투를 바꿉니다. '나중에...', '나중에?', '잠, 나이중에', 그러다 나중엔 체념한듯 '나중에에에'하고, 엄마를 달려러 '에'를 길게도 뻗니다. 그 '나중에'를 몇십 번이나 거듭한 후에 막내는 '요사체에 붙잡혔던 제 방을 꺼내올 수 있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중'의 '공성'도 곧 헐리게 된답니다. '나중에' 재건축되면 '네 방도 생겨' 막내가 제 딸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말총 갓'처럼 올라가는 거꾸집을 보며 제 딸에게 방을 어떻게 꾸밀까 하는 40대가 되었지요. 이향아 시인은 충남 서천 출생, 1966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습니다. 이어 시집 '눈을 뜨는 연습' 등 26권, 수필집 '쓸쓸함을 위하여' 등 18권을 냈습니다. 그는 만년의 깊은 사유의 우물에서 시의 두레박을 넣어 넘칠 듯 그러나 넘치지 않은 시의 물을 독자 대접에 부어주는 정보 깊은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동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8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 본 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규토록 월 15,000원 1부 800원